

POLITICS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李대통령 공약...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시의회 조례 통과...박미정 발의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 2·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지난 1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에게 가족 등 피해자 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보다 현실적인 회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가족 역시 심리적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과 함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리 회복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시책 마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필요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치유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국내 최대 테크 전시회
‘AI도시 광주’ 위상 입증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이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 전시회에서 이목을 끌며 ‘AI 중심도시’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AI & Big Data Show)’에 참가해 광주 AI 생태계의 비전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테크 코리아’는 AI, 빅데이터, IoT, 로봇,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이 총망라된 국내 최대 규모의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14개국 400여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500여개 부스 규모로 펼쳐졌으며, 산업 전반의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AI사업단은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광주 AI메이커센터 및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구축 현황, AI 창업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광주의 핵심 전략 사업을 집중 소개해 국내외 참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대형 LED 화면을 통한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AI 집적단지 소개 영상, 정책 브로슈어, 체험형 전시 콘텐츠 등은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AI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AI 스타트업들도 기술 시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AI 기반 폐질환 및 암 조기진단 웹 플랫폼을 개발한 토라(TO-RAH), 청각 보조 앱 ‘클리어센스 오디오(ClearSense Audio)’를 선보인 엠파웨이브(mpWAV), 교육 특화 STT(음성 텍스트 변환) 기반 AI 상담 앱을 운영 중인 헬프티처(HelpTeacher) 등은 기술 시연과 상담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주철현 대표발의...사업 재편 세제·전기요금 등 지원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등 특례 포함...“지역경제 회복”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가운데 석화산업의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전남지역 공약이행을 견인하는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의 필수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최대 규모 집적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를 비롯한 전남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도 주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남

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밝혔고,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펙트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인수합병(M&A)을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하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제정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우원식 의장 “개헌 논의 시기 잘 조절해야”

취임 1년 회견서 “추경에 적극적 역할”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당파와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아가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우 의장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개인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과제로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고, 교섭단체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는데 심의할 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총리 직속 국가수사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

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포) 소속이다.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도, 지역 대학 글로벌대학 본지정 힘 모아

대학 특성화 전략 등 공유
연계사업 발굴 TF 첫 회의

전남도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된 ‘동신대학교-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과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통합’의 본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해로 마지막인 글로벌대학30 공모에 ‘동신대학교 연합’은 지역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분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공공형 연합대학’ 모델을, ‘목포해양대 통합’은 해양 산업계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해양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1국 1해양대 모델을 제시해 각각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전남도는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목표로 도청 실국, 출연기관,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글로벌대학 대응 TF’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11일 전남도청에서 키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11일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목표로 도청 실국, 출연기관,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글로벌대학 대응 TF’ 첫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글로벌대학30 사업개요, 본지정 대응 전략, 예비지정 대학의 특성화 계획 등을 공유하며,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도는 향후 글로벌대학 대응 TF를 본격 운영에 대학별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계획서에 반영해 대학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에 상호 연계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행계획서 제출 이후 철저한 대면평가 준비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건의 활동도 적극 펼쳐 두 대학이 모두 본지정을 받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글로벌대학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핵심전략”이라며 “전남도가 순천대, 목포대에 이어 3년 연속 글로벌대학 지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예비지정 대학은 9월 글로벌대학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진숙,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입법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은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 받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전진숙 의원은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단 1종에 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독·과다 처방받는 ‘의료쇼핑’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전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현장 방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면담을 거쳐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정을 해소하며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중 24명만 선정한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다”며 “저의 입법활동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